

#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3백 89만 5천원
- 징수결정액 : 1천 1백 55만 5천원
- 실제수납액 : 1천 1백 55만 5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100%)임.

###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3,895	11,555	11,555	-	-	-	296.7	100.0
세외수입	3,895	11,555	11,555	-	-	-	296.7	100.0
경상적세외수입	45	70	70	-	-	-	155.6	100.0
이자수입	45	70	70	-	-	-	155.6	100.0
기타이자수입	45	70	70	-	-	-	155.6	100.0
임시적세외수입	3,850	11,484	11,484	-	-	-	298.3	100.0
보조금반환수입	-	10,986	10,986	-	-	-	-	100.0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	10,986	10,986	-	-	-	-	100.0
기타수입	3,850	498	498	-	-	-	12.9	100.0
그외수입	3,850	498	498	-	-	-	12.9	100.0

## 2. 세출결산

- 예산액 : 13억 5천 6백 65만 3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3억 5천 6백 65만 3천원
- 지출액 : 12억 3천 4백 54만 2천원
- 이월액 : 0원
- 집행잔액 : 1억 2천 2백 11만 1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9.0%(전년도15.1%)가 발생
  - 불용사유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28,665천원), 지출잔액(73,306천원) 및 낙찰차액(20,139천원)임.

### <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b>총 예산</b>	1,356,653	1,234,542	-	122,111	9.0
<b>사업예산계</b>	1,299,961	1,192,099	-	107,862	8.3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299,961	1,192,099	-	107,862	8.3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299,961	1,192,099	-	107,862	8.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75,693	174,235	-	1,458	0.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45,126	-	14,974	24.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42,503	-	10,057	19.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346,564	-	42,224	10.8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62,445	-	355	0.5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47,079	-	10,121	6.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47,859	-	6,861	12.5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52,000	151,111	-	889	0.5
서울 인권 콘퍼런스	111,280	103,026	-	8,254	7.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6,510	-	11,311	63.4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65,642	-	1,358	2.0
<b>일반예산계</b>	56,692	42,443	-	14,249	25.1
기본경비	56,692	42,443	-	14,249	25.1

-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없음.

-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 4. 채권현재액 : 해당없음.
-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인권담당관 관리 공유재산

- 일반재산 2건 : 총 5억 2천 2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	-	-	-
행정 재산	합 계	-	-	-
	공용재산	-	-	-
	공공용재산	-	-	-
	기업용재산	-	-	-
	보존재산	-	-	-
일반재산	522,168	-	-	522,168



## Ⅱ. 검토 및 의견

### 1. 세입결산

#### 가. 세밀한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 이나,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296.7%임.
  - 당초 예산편성시 ‘그외수입(49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율(12.9%)이 저조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10,986천원)’은 예산수납률 대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3,895	11,555	11,555	-	-	-	296.7	100.0
세외수입	3,895	11,555	11,555	-	-	-	296.7	100.0
경상적세외수입	45	70	70	-	-	-	155.6	100.0
이자수입	45	70	70	-	-	-	155.6	100.0
기타이자수입	45	70	70	-	-	-	155.6	100.0
임시적세외수입	3,850	11,484	11,484	-	-	-	298.3	100.0
보조금반환수입	-	10,986	10,986	-	-	-	-	100.0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	10,986	10,986	-	-	-	-	100.0
기타수입	3,850	498	498	-	-	-	12.9	100.0
그외수입	3,850	498	498	-	-	-	12.9	100.0

- 인권담당관은 세입예산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통한 세목별,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세출결산

### 가. 예산 불용률 과다

- 인권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13억 5천 7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 2천 3백만원)은 9.0%(전년도 15.1%)로 서울시 일반회계(2.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은 불용률(63.4%)이 과다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2018년 35.9%→2019년 40.6%→2020년 23.5%→2021년 24.9%)으로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19.1%)”,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12.5%)” 사업도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1,356,653	1,234,542	-	122,111	9.0
사업예산계	1,299,961	1,192,099	-	107,862	8.3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299,961	1,192,099	-	107,862	8.3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299,961	1,192,099	-	107,862	8.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75,693	174,235	-	1,458	0.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45,126	-	14,974	24.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42,503	-	10,057	19.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346,564	-	42,224	10.8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62,445	-	355	0.5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47,079	-	10,121	6.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47,859	-	6,861	12.5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52,000	151,111	-	889	0.5
서울 인권 콘퍼런스	111,280	103,026	-	8,254	7.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6,510	-	11,311	63.4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65,642	-	1,358	2.0
일반예산계	56,692	42,443	-	14,249	25.1
기본경비	56,692	42,443	-	14,249	25.1

- 특히, 인권담당관은 세출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과 같이 지속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1억원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1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2,500,000	29,984,570	22,515,430	42.8%
1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0,000,000	1,491,200	8,508,800	85.0%
19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운영비	3,000,000	2,365,000	635,000	21.1%
1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무관리비	2,000,000	1,105,110	894,890	44.7%
2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7,200,000	34,512,060	12,687,940	26.8%
2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7,000,000	3,703,250	3,296,750	47.0%
2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381,588,000	253,337,400	128,250,600	33.6%
20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운영비	3,000,000	660,000	2,340,000	78.0%
2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무관리비	2,000,000	900,000	1,100,000	55.0%
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사무관리비	8,000,000	5,883,960	2,116,040	26.4%
20	기본경비	국내여비	13,090,000	4,510,000	8,580,000	65.5%
21	서울특별시	사무관리비	41,200,000	31,208,375	9,991,625	24.2%

	인권위원회 운영					
2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행사실비지 원금	6,300,000	1,937,100	4,362,900	69.2%
21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운영비	3,000,000	660,000	2,340,000	78.0%
21	서울 인권 컨퍼런스	사무관리비	4,320,000	2,910,350	1,409,650	32.6%
21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무관리비	17,820,000	6,509,500	11,310,500	63.4%
21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402,000	28,726,360	10,675,640	27.0%
21	기본경비	국내여비	13,090,000	9,516,850	3,573,150	27.3%

- 특히, 인권담당관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사업별 사무관리비는 총 8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9.1%를 집행(1억1천5백만원, 불용률 11.9%)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당초 편성예산 보다 초과하여 집행했는가 하면, 50%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 수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저해는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먼저,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사업 중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개최’비(800만원)는 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 처리하였으며,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중 ‘회계교육 및 컨설팅’(20만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사업 중 ‘인권위원회 포럼(373만원)’,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사업 중 ‘인권침해상담 신고 홍보자료제작(248만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사업 중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18만원)’,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중 ‘바닥동판 추가 설치(21만원)’, “기본경비”사업중 ‘행정장비수리비(68만원)’ 및 도서구입비(8만원) 등 총 8건은 예산 편성 대비 초과지출(756만원)하였고,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정책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은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음.

[인권담당관 사무관리비 초과집행 및 50%이상 미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예산현액	집행실적 (C)	집행잔액 (D) = (B) - (C)	불용률 (D/B)
		(B)			
계	849,930	849,930	748,467	101,463	11.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5,120	5,120	4,960	160	3.1%
사업설명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620	620	260	360	58.1%
회계교육 및 컨설팅	4,500	4,500	4,700	-200	-4.4%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41,200	41,200	31,208	9,992	24.2%
위원회 회의 개최	34,200	34,200	20,476	13,724	40.1%
인권위원회 포럼	7,000	7,000	10,732	-3,732	-53.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52,560	42,503	10,057	19.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28,800	28,800	27,603	1,197	4.2%
조사 매뉴얼 및 결정례집 발간	10,000	10,000	7,235	2,765	27.7%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	5,760	3,595	2,165	37.6%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협력관계 구축	8,000	8,000	4,070	3,930	49.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1,588	381,588	339,755	41,833	10.9%
선정위원회 운영	4,800	4,800	3,748	1,052	21.9%
자문회의 운영	6,000	6,000	3,598	2,402	40.0%
서울인권아카데미 (인권교육)	215,020	215,020	190,525	24,495	11.4%
인권강사 양성	60,600	60,600	60,400	200	0.3%
교육 모니터링	29,668	29,668	20,700	8,968	30.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5,500	65,500	60,784	4,716	7.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30,000	30,000	29,975	25	0.1%
인권 침해 상담 신고 홍보 자료 제작	2,000	2,000	4,480	-2,480	-124.0%
인권정책 홍보 자료 제작	28,000	28,000	25,495	2,505	8.9%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57,200	147,079	10,121	6.4%
인권 현안 실태조사	60,000	60,000	58,200	1,800	3.0%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7,200	7,200	7,379	-179	-2.5%
인권정책회의 개최	8,000	8,000	-	8,000	100.0%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 터링 용역	82,000	82,000	81,500	500	0.6%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1,720	51,720	47,199	4,521	8.7%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4,080	4,080	4,290	-210	-5.1%
체험프로그램 운영	45,800	45,800	41,550	4,250	9.3%
위원회 운영비	1,840	1,840	1,359	481	26.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2,000	2,000	2,000	-	0.0%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	2,000	2,000	-	0.0%
서울인권 콘퍼런스	4,320	4,320	2,910	1,410	32.6%
콘퍼런스 자문단 운영	4,320	4,320	2,910	1,410	32.6%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7,820	6,510	11,310	63.4%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7,820	6,510	11,310	63.4%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67,000	65,642	1,358	2.0%
인권영향평가운영 용역	67,000	67,000	65,642	1,358	2.0%
기본경비	39,402	39,402	28,726	10,676	27.1%
기본사무용 종이류	456	456	457	-1	-0.2%
소규모수선비	110	110	59	51	46.4%
행정장비수리비	1,260	1,260	1,940	-680	-54.0%
도서구입비	200	200	277	-77	-38.5%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24,960	24,960	14,074	10,886	43.6%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12,416	12,416	11,919	497	4.0%

- 이외에도 예산편성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방만한 예산집행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사무관리비’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인권담당관은 예산의 규모를 넘어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경비 편성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예산 편성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 소극적 사업추진 개선 필요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60,100천원) 대비 불용률은 24.9%(14,974천원)이며, ‘행사실비지원금’ 중 ‘인권행정 공동연수 개최’는 예산현액(3,000천원) 대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60,100	45,126	14,974	24.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1,200	31,208	9,992	24.3
		위원회 회의개최	34,200	20,476	13,724	40.1
		인권위원회 포럼	7,000	10,732	△ 3,732	△ 53.3
	업무추진비		12,600	11,980	620	4.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0	11,980	620	4.9
	행사실비 지원금		6,300	1,937	4,363	69.3
		인권행정 공동연수 개최	3,000	-	3,000	100
지자체인권협의회 및 현안간담회		3,300	1,937	1,363	41.3	

- 특히, ‘인권행정 공동연수 개최’ 행사실비지원금은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인권행정 공동연수 예산 집행 실적]

(단위:회)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3,000	-	3,000	100%
2020	3,200	-	3,200	100%
2019	3,200	-	3,200	100%

- 인권담당관은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를 코로나 19 발생 및 지속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등이 축소 (개최횟수 및 인원) 운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 후 미집행 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반증과 예산 확보만을 위한 부서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인바, 인권담당관은 필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1년 인권위원회 개최 실적은 총 14회 개최로 직전 2년 (2020년 15회, 2019년 13회)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권위원회 개최실적이 활발한 연도('17년 26회→ '18년 23회)에 비해서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인권담당관은 인권위원회의 개최 미비, 포럼 축소 개최,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력구축 등 인권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한 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인권위원회 개최 현황 실적]

(단위:회)

연도	합계	정기회	임사회	소위원회
합계	42	12	8	22
2021	14	4	2	8
2020	15	4	3	8
2019	13	4	3	6

○ 한편, 인권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기능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한 공동성명서 제안 등의 세밀한 협력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	인권 담당부서		인권위원회	
	부서명	팀명	위원장	위원회임기
서울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위촉직, 호선	3년
부산	인권노동정책과	인권증진팀	위촉직, 호선	2년
대구	시민소통과	인권팀	위촉직, 호선	2년
인천	혁신담당관	시민인권팀	위촉직, 호선	2년
광주	민주인권과	인권정책팀	위촉직, 호선	2년
대전	자치분권과	인권팀	위촉직, 호선	2년
울산	시민소통협력과	인권공동체팀	위촉직, 호선	2년
세종	자치분권과	자치협력팀	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2년
경기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위촉직, 호선	2년
강원	총무행정담당관	인권센터	위촉직, 호선	2년
충북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위촉직, 호선	2년
충남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위촉직, 호선	2년
전북	인권담당관	인권정책교육팀	위촉직, 호선	2년
전남	도민행복소통실	인권센터	위촉직, 호선	3년
경북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미구성	미구성
경남	자치행정과	인권보호팀	도의원	2년
제주	자치행정과	인권팀	위촉직, 호선	2년

기관명	인권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수	권한 및 기능
서울	한00	15 (당연직 1)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부산	정00	14 (당연직 2)	심의·자문
대구	00	14 (당연직 1)	심의
인천	윤00	15 (당연직 1)	심의·정책 개선 권고
광주	홍00	20 (당연직 1)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대전	이00	12 (당연직 1)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울산	최00	13 (당연직 1)	심의
세종	류00	15 (당연직 2)	심의·정책 개선 권고
경기	홍00	15 (당연직 2)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강원	이00	15 (당연직 1)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충북	안00	15 (당연직 1)	심의·정책 개선 권고
충남	이00	20 (당연직 1)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전북	정00	15 (당연직 3)	심의·자문·정책 개선 권고 (조사결과) 시정 권고
전남	강00	9 (당연직 1)	심의
경북	이00	15 (당연직 1)	심의
경남	승00	9 (당연직 1)	심의
제주	신00	15 (당연직 1)	심의·정책 개선 권고

## 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실천을 위해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3억 8천 9백만원)중 3억 4천 7백만원(집행잔액 4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동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88,788	346,654	42,224	10.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381,588	339,755	41,833	11.0
		선정위원회 운영	4,800	3,748	1,052	21.9
		자문회의 운영	6,000	3,598	2,402	40.0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215,020	190,525	24,495	11.4
		인권강사 양성	60,600	60,400	200	0.3
		교육 모니터링	29,668	20,700	8,968	30.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5,500	60,784	4,716	7.2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7,200	6,809	391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	6,809	391	5.4

- ‘사무관리비’중 ‘선정위원회 운영’, ‘자문회의 운영’, ‘교육모니터링’은 동사업 평균 불용률보다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당초 세밀한 사업 설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사업중 서울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매년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강의의 협의성에 따른 교육의 관심 하락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인권에도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 다양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인권교육을 특정기관(인권정책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바, 장기간 인권교육 수행에 따른 다양성 부재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와 프로그램 허용을 통해 서울시 및 출연·출자 기관에 부합하고 적합한 주제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선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권담당관은 인권교육 담당기관 선정방법은 전문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제한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특정기관이 장기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의견을 개진함.

○ 또한, 인권담당관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사업의 달성목표를 인권 교육 횟수에서 인권교육 이수율로 변경하였는 바, 횟수와 이수율과의 실익 여부와 함께 이수율 변경에 따른 효과성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인권교육 추진실적]

2019년도	○ 집합교육 222회 실시, <u>이수율 85%</u> - 4급이상 5회, 본청 70회, 사업소 110회, 투자출연기관 34회, 복지시설장 3회
2020년도	○ 집합교육 50회 및 온라인 교육(인재개발원) 실시, <u>이수율 87%</u> - 집합교육 : 본청7회, 사업소 31회, 투출기관 12회 - 온라인교육 : 인재개발원 5개 과정
2021년도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인재개발원) 5개 과정 실시, <u>이수율 70% 이상 목표</u>

○ 한편,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공무원 등 인권교육 이수율(%)]는 전년도 실적(87.23%)보다 낮은(65%)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이 지적되었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공무원 등 인권교육 이수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연간 이수율 = 이수인원/대상인원*100	목표	60%	65%
		실적	87.23%	92.22%
		달성률(%)	145%	141%

#### 마.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 관련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62,800천원) 대비 불용률은 0.6%(355천원)로 비교적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전년 대비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효과로 보여짐.
- 다만,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자료 제작’비는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통계목내에서의 원칙없는 예산 집행은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62,800	62,445	355	0.6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30,000	29,975	25	0.1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자료 제작	2,000	4,480	△ 2,480	△ 124
		인권정책 홍보자료 제작	28,000	25,495	2,505	8.9
	행사운영비		32,800	32,480	330	1.0
		인권토론회	8,400	8,400	-	-
		인권전시회	16,400	16,400	-	-
	인권특강	8,000	7,670	330	4.1	

- 또한, 인권담당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인권보고서 발간 부수도 150부로 소량 제작 배포하여 서울시의 인권 정책의 방향과 역할 등을 이해하고 알리는데 부족한 상황으로 인권증진이 아닌 생색내기용 보고서로 보여질 우려는 없는지와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인권홍보 자료 및 동영상 제작 및 홍보실적]

연도	홍보자료 등 제작내역
2021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2019~2020) 제작: 150부, 25,395천원 ○ 인권침해 사례 웹툰 제작: 12편, 4,605천원
2020	○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1편, 16,400천원 ○ 혐오표현 예방 길라잡이 제작: 4,000부, 9,713천원 ○ 직장내괴롭힘 사례 웹툰 제작: 9편, 3,780천원
2019	○ 상반기 인권문화행사(인권사진전): 5.13~23, 15,000천원 ○ 인권침해구제 안내 리플릿 제작: 15,000부, 5,525천원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2017~2018) 제작: 300부, 27,170천원
2018	○ 인권침해구제 안내 리플릿 제작: 15,000부, 9,442천원 ○ 서울시 인권행정 홍보용 수첩 제작: 1,500부, 6,050천원 ○ 인권행정 소개 홍보책자 제작: 2,000부, 4,453천원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책자 제작: 300부, 4,018천원
2017	○ 시민인권보호관 홍보영상물 제작: 2편, 14,770천원 ○ 인권정책 홍보책자 제작: 1,000부, 4,017천원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2013~2016) 제작: 600부, 28,747천원

-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전시회의 실효성과 형식적 전시행정으로 비취질 여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바.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관련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인권관련 주요 역사적 장소에 대한 공간을 조성하고,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54,720천원) 대비 불용률은 12.5%(6,861천원)이며, 이중 ‘바닥동판(표지석)유지보수’비는 불용률이 78.0%(집행잔액 2,340천원)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인권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54,720	47,859	6,861	12.5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무관리비		51,720	47,199	4,521	8.7
		바닥동판(표지석) 추가설치	4,080	4,290	△210	△5.1
		체험프로그램 운영	45,800	41,550	4,250	9.3
	위원회 운영비	1,840	1,359	481	26.1	
	공공운영비		3,000	660	2,340	78.0
	바닥동판(표지석) 유지보수	3,000	660	2,340	78.0	

- 한편, 인권담당관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예산편성(4천5백8십만원) 대비 90.7%를 지출하여 9.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인원이 대부분 서울시 유관기관 등 단체참가자 위주로 진행되어 실적쌓기용 행사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개인 참가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유인요소 제고에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기관 및 학교, 인원 등 세부내역]

연도	기관(학교)명 또는 개인	인원 수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16) :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화곡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동작마을발전소, 엠네스티22그룹, 별별기자단, 인권정책연구소, 상문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대방중학교, 동작중학교</li> <li>○ 개인 14명</li> </ul>	1,342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12) : 성동구청, 영등포구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마을발전소,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뉴스(별별기자단), 장승중학교</li> <li>○ 개인 13명</li> </ul>	356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21): 서울시설공단, 강동구청,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노원구 주민, 강동구 주민, 서울시지역교육복지센터, 한국여성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경문고등학교, 제천여자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신남중학교, 동작중학교, 중계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li> <li>○ 개인 85명</li> </ul>	2,055명

○ 또한, 동 사업은 민주화(4월길·6월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노동(전태일길·구로길)을 포함한 총 3개 테마를 중심으로 탐방이 축소 운영중에 있으나,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인권탐방 코스 확대 및 추가 발굴, 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서울의 인권친화적 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의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도	기간	내용	횟수
2021	‘21. 4. ~ 12.	○ 현장탐방: 3개코스 및 통합코스 운영(4회) ○ 온라인 탐방: 4개코스 운영(52회) ○ 온라인 탐방영상 추가 제작(2편)	56회
2020	‘20. 5. ~ 12.	○ 현장탐방: 6개 코스 및 통합코스 운영 ○ 온라인 탐방: 탐방영상 제작(2편) 및 시범 상영회 개최	23회
2019	‘19. 6. ~ 12.	○ 6개 코스 운영 ○ 통합코스, 외국인 대상 탐방(남산자유길) 각 1회 시범운영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한 참가신청서 온라인화 도입 ○ 탐방프로그램 홍보영상 제작(총 6개코스)	83회

**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업 관련**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업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 구제 및 보호와, 서울시 정책 및 법규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인권시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2,560천원) 대비 불용률은 19.1%(10,057천원)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협력관계구축’은 불용률이 49.1%(집행잔액 3,930천원)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52,560	42,503	10,057	19.1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2,560	42,503	10,057	19.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개최	28,800	27,603	1,197	4.2
		조사매뉴얼 및 결정례집 발간	10,000	7,235	2,765	27.7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	3,595	2,165	37.6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협력관계구축	8,000	4,070	3,930	49.1

- 다만, 인권침해 사항에 따른 상담과 조사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p>○ <b>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개최 일시: 매월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li> <li>· 정기회: 매월 3주째 금요일 오전 10시</li> <li>· 임시회: 성희롱, 이의신청 등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경우 정례회 일정 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또는 3명 이상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요구 시</li> </ul> </li> <li>· 내 용: 상정 안건 심의 및 기타사항 논의, 시정권고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부서, 관리부서 등 시정권고 결과 통지</li> </ul> </li> </ul>
--

- 한편, 최근 3년간 집행잔액(2019년 24만원, 2020년 3백만원, 2021년 1천만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산변경 사용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적정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1	52,560	0	0	52,560	42,503	0	10,057
2020	52,560	0	0	52,560	49,633	0	2,927
2019	49,560	0	6,000	55,560	55,320	0	240

- 또한, 결정례집 발간 및 조사자료집 제작 예산을 50% 삭감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결정례 발간 등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오히려 결정례 발간 등을 확대하여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시민인권배심원제 사업의 경우 연 3회 계획을 하고 있으나, 실제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추진 실적 등 실제 수요에 맞도록 과감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배심원제 참여건수와 개최건수]

연도	차수	참석인원	비고
2021	1차 (4.2)	총 17인 (배심원13인, 신청인(참고인)1인 외)	배심원· 신청인(참고인)·피 신청인 외 : 시민인권보호관 및 간사·서기 등 인권담당관 직원
2020	1차 (1.9)	총 25인 (배심원 14인 외)	
	2차 (7.30)	총 22인 (배심원 16인, 신청인(참고인) 1인 외)	
	3차 (10.29)	총 21인 (배심원14인, 신청인(참고인)2인, 피신청인 1인 외)	
2019	모의 (4.5)	총 80인 (배심원 68인 외)	
	2차 (8.29)	총 25인 (배심원 14인, 신청인(참고인) 3인, 피신청인 3인 외)	

[시민인권배심원제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 현황
2021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	1,490
2020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	5,610
2019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	6,272

[최근 3년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구분	사건 접수	처리 현황					
		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총계	346	87 (병합9건 포함)	50 (병합5건 포함)	128 (병합4건 포함)	60	18	3
'21	83	19 (병합1건 포함)	15	34 (병합2건 포함)	9	4	2
'20	138	36 (병합5건 포함)	19 (병합4건 포함)	49 (병합1건 포함)	28	5	1
'19	125	32 (병합3건 포함)	16 (병합1건 포함)	45 (병합1건 포함)	23	9	.

출처 : 2021년 행정사무감사 74쪽.



## 아. 종합의견

- 인권담당관은 2021년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각종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미비, 사업미집행 및 축소 시행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주요사업별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권담당관은 다른 실·국에 비하여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1년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공무원 등 인권교육 이수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연간이수율 = 이수인원/대상인원*100	목표	60%	65%
		실적	87.23%	92.22%
		달성률(%)	145%	141%
민간단체 인권증진활동 사업달성률(%)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인권단체의 사업 실행계획 대비 달성률 = 사업(단체)별 달성률의 합/사업(단체)수	목표	80건	70%
		실적	83건	75.3%
		달성률(%)	103%	107%

전문위원

김정덕